



탄압과 항쟁 사이 기로에 선 미얀마

관련 기사 5, 6~7면

N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3면

타이 사회주의자
초청 토론
쿠데타와 대중 항쟁
— 기로에 선 미얀마

6~7면

핵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8~9면

파리 코뮌 150년
잠깐이었지만
사상 최초의
노동자 국가

4면

쌍용차 부도 위기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 필요하다

10면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브라질 룰라
정계 복귀

11면

채용 성차별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최근 동아제약의 성차별적 채용 면접 사건이 젊은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아제약 입사 면접에서 한 여성 지원자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은 있냐?”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동아제약 사장은 “매뉴얼을 벗어난” “불쾌”한 질문을 던진 면접관의 실수라고 둘러댔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겪은 성차별적 면접 경험을 온라인에 쏟아냈다.

“똥똥한데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 “사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지금 볼품없다”, “면접관이 남자일 수도 있는데 왜 불리하게 바지를 입었냐” 등 외모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모욕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애인 유무, 결혼·출산 계획 등을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채용 성차별은 곳곳에 만연해 있다. 2018년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조직적인 채용 성차별이 드러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남녀 비율을 4:1로 정한 채 선발했고, KB국민은행은 아예 남녀의 합격을 대놓고 뒤바꿔 버렸다.

당시 기업주 처벌과 개선 요구가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수 조사조차 거부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업을 보호했다.

기업주 처벌은커녕, 심지어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여가부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국민은행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맺었다. (관련 기사: 본지 290호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생색내기용 미봉책

동아제약 사건을 계기로 채용 성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알맹이는 별로 없다.

가령, 여성가족부는 채용·고용 성차별 등을 자행한 기업은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여가부는 출산·양육 지원 등을 ‘잘 하는’ 기업을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성차별을 저지르지 않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못 된다. 이번에 성차별 면접으로 문제가 된 동아제약조차 이미 2016년에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여가부의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성차별을 고발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채용 성차별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괴롭히며 해고한 일이 일어났다. ‘가족 친화 인증’ 방안

이 기업의 성차별을 막는 데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성평등 채용 문화 정착” 방안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 제작·배포,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자발성에 기댄 미미한 조처뿐이다.

노동부의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방안도 빈약하다. 물론 여성들이 채용 시 차별을 받았을 때 신고할 곳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방안에는 신고 후 조사·규제·처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채용 성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에는 여러 허점이 있다.

고용·채용 차별 금지 규정은 모집 공고에 차별적 표현이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거듭 요구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개선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채용 성차별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업 규제책이 없다. 법 위반이 드러나도 고작 500만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성평등”을 얘기하고 알맹이 빠진 면피용 조처만 내놓을 뿐, 채용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보다 기업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기업 지원에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임시직·저임금의 저질 일자리를 “코로나19로 악화된 여성 고용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59호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노동계급 여성이 겪는 성차별과 고통을 완화하려면 위선적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투쟁으로 압박해야 한다.

한편 구직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아로새겨진 여성 차별의 일부이다.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에 체계적으로 뿌리박혀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데서 핵심적이다. 따라서 여성 차별을 체계적으로 부추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도전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임금 인상 얻어 내다

김지태

삼성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간 삭감돼 온 임금에 불만을 터뜨리며 지난 3월 9일부터 파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철만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일명 ‘파워공’들이다.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한 파업 대열이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파업은 삼성중공업에서 보기 드물게 벌어진 대규모 하청 노동자 투쟁이었다. 몇 해 전에 일부 노동자들이 업체 폐업으로 공장 밖으로 밀려나 저항했던 경험에 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커졌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투쟁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도 참가해 지원했다.

노동자들은 매일 한 곳에 모였다가 해산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했다가, 주말에 거제공업설운동장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3월 15일부터는 매일 아침 삼



3월 15일 삼성중공업 앞에서 열린 ‘파워공’ 파업 집회

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길게 도열해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도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수년간 삭감돼 온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 노동자들의 일당은 한때 27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 수년간 조선업 위기 속에서 점차 삭감돼 지금은 25년 전과 비슷한 14만 5000원으로 떨어졌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일감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

면서 불만이 더 가중됐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들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부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모이자 다른 노동자들도 합류했다.

노조에 따르면, 결국 사측은 일당을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1만 5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

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연월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투쟁의 확산

노동자들은 이웃한 대우조선의 파워공들보다 임금이 낮은 것에도 불만이 많았다. 대우조선 파워공들은 2019년 3월에 단호하게 파업해서 임금을 올린 바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당시 투쟁을 경험한 일부 노동자들이 삼성중공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번 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한 사업장에서 했던 투쟁 경험을 자산 삼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서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말했다. “그동안의 투쟁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대우조선 투쟁 때보다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모였고 요구도 좀 더 디테일합니다.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배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조선업 위기 속에서 임금이

삭감당하고 차별당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종종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10일에도 현대중공업의 물량팀(단기계약직) 노동자 수백 명이 작업거부를 벌여 미지급된 휴업수당 일부를 따냈다. 2월에 벌어진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일부 공정이 멈춰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됐는데, 사측이 물량팀 노동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도 이런 투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략 1000명 내외로 추산되는 삼성중공업 파워공들 가운데 400여 명이 파업에 나서자 사측도 압력을 받았다. 사측은 임금을 약간 인상하는 제시안을 내놓는 한편, 노동자들의 작업 복귀를 회유·종용했지만 노동자들은 굳건하게 버티며 일주일 간 파업을 벌였다.

그렇게 한 결과, 노동자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투쟁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정선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부산·창원·세종·용인 등 전국 곳곳에서 정치인·관료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조사하기 전인데도 민주당에서는 서영석, 김주영,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등 국회의원들 이름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홍문표, 강기윤 등이 일가친척이 보유한 땅 근처에 개발 사업 유치를 추진했거나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총괄한 행복청장(차관급) A의 땅 투기 의혹도 폭로됐다. A가 퇴임 직후 세종시에 산 땅(9억 8000만 원)이 불과 9개월 만에 스마트



청년들은 월세 전전하는 동안 투기·부패 키운 정부 3월 15일 LH 서울지역본부 앞 청년 시위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결정돼, 땅값이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종시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셀프 조사를 맡겼다.

문재인의 일가친척도 의혹의 대상이다. 문재인의 처남은 노무현 정부 시기 즈음(2002~2009년)에 성남시 그

린벨트 지역에 땅을 샀다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돼 47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거뒀다. 문재인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었던 만큼 의혹은 충분히 해명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딸은 정부 2.4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영등포 역세권의 다가구주택

을 팔아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들에게 톤돈일지 몰라도, 사전 정보를 이용해 득을 봤다는 의심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사태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사태를 축소하기 급급하다. 의혹 폭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사를 명령하더니, 의혹의 몸통격인 국토부를 포함시킨 정부합동조사에서는 1차로 LH 직원 7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최초 폭로 포함 총 20명). 제도권 언론들보다 못한 실적이다.

정의당은 정부 조사에서도 의심 사례자가 169명이었지만 정부가 축소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최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관련 전수 조사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개인 차명만이 아니라 리츠, 펀드 형태의 투기도 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조사는 순 엉터리인 것이다.

문재인은 와중에 우파와 부자들이 요구한 공급 확대 계획인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변창흠을 사실상 유임시키고 있다.

변창흠은 LH 사장이던 지난해 7월 LH에 직원들의 투기 제보가 접수됐지만 이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이 제보를 묵살했다. 역시나 변창흠의 투기 직원 변호 발언은 자기 변호였던 것이다.

정부는 ‘셀프 수사’를 하며 시간을 끌고,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하며 수사를 통제하려 해 왔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밝혀낸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검찰을 배제해 전반적인 수사력을 약화시킨 것에 대한 불신이 본질이다. 부패를 저지른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칭 검찰 개혁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핑계대며 시간만 끌다가 최근에야 특검,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전수조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실행 과정에서 시간만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취임 후 최저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우파가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의 유일한 희망이 야권 분열을 통한 어부지리인데 말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은 페이스북에 매우 신경질적인 글을 올려 반감만 더 키웠다.

불법 투기는 단지 “적폐” 아닌 현재의 권력형 부패이다

결국 정권 최대 위기 앞에서 문재인은 최근 형식적인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런데 “부동산 적폐 청산”을 못한 게 잘못이라며 책임을 과거 정부에게 미뤘다. 물론 정부 스스로 적폐 청산에 기만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신적폐는 문재인 정부 아닌가? 부동산 문제에서 우파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적폐”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이다.

부동산 폭동의 한 요인인 분양가 제한을 푼 것이 김대중 정부이고, 원가 공개를 공약했다가 공기업도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공약을 뒤집은 것이 노무현이다. 노무현 정부도 2기 신도시 개발 부패가 드러나 정치적 타격을 받았었다.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을 자처한 손혜원은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한 목포 투기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집 2채 보유가 들통나 그중 하나를 팔라고 하니 강남 아파트를 놔두고 지역구 집을 파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또 다른 청와대 수석은 집 1채만 보유하라는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흑색동 투기로 사표를 낸 것이 애처롭게 보일 지경이다.

이낙연은 이명박 정부 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사를 통합해 LH를 만든 것이 문제라며 “LH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해경 해체’가 떠오르는 가소로운

언사다. 이낙연도 서울 집이 수십억 폭등한 수혜자이다.

정부 여당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부산 엘시티 분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이 엘시티에 거주하는 것도 노린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의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심종팔구 강남 우파 정치인들에게도 구린 구석이 있을 테지만, 그것이 발견된다 해도 박근혜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는 운동에 올라타 그 덕분에 집권한 정부의 부패 행각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 투기 사태는 단지 과거의 “적폐”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권력형 부패** 문제인 것이다.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 위에 싹튼 부패

정부와 우파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직사회 기강” 문제라며 공직자 개인들의 도덕 문제로 환원한다. 시장경제의 문제를 가림과 동시에 체제의 관리자이자 수혜자로서 자신들이 부패 사슬을 형성하고 있음도 은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와 부패는 시장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윤을 위해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는 체제에서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위한 투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가 기구의 고위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거나 심지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

정하게 이익을 취할 여지가 생긴다.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 중심 개발로 성장해 오다 보니, 정부 관료들이 뇌물을 받는 문제가 만연했다. 그러나 이것이 ‘투명한 시장 경쟁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부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개발 사업권을 두고 여전히 건설 기업과 국가관료들이 유착할 수 있다. 오히려 시장경쟁은 이윤 경쟁을 더 격화시키고 보편화하므로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이윤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은 더 커진다.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국가의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요

구하는 등 국가 관료와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 연결망이 형성된다. 이 과정이 합법이든 아니든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의 부를 농단한 것의 결과물이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퇴임 후까지 보장받고, 일부는 자산가로 변신한다.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뿐 아니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입찰 비리 등 민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로비 등은 계속돼 왔다.

민간 공급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하면서 부패를 잡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퍼오겠다는 거짓말일 뿐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여당은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이 최악으로 악화되자 이제야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고 뒤통을 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수년간 미뤄 온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 정부는 투기를 부추겨 온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한 2·4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한겨레> 같은 친정부 언론도 정부의 2·4 대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자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공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나 민주당 주류보다는 나은 얘기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타협적인 약점도 명백하다.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로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주택 월 임대료를 전용면적 74제곱미터에 69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노동계급 가구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차라리 그만한 이자를 내며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 정당들은 정부가 나서 공공

주택 공급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공공택지는 100퍼센트 집 없는 서민”에게 공급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토지주택부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토지는 공공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전면 실현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투기를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수익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노동자·서민의 주거난에 숨길 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침체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와 구조적 부패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이런 대안이 실현되려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1987년 노동자 투쟁의 파고 속에서 도시 철거민 투쟁 등의 영향으로 1989년에 시작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결국 삶에 기본으로 필요한 땅과 주택이 부자들의 이윤을 위해 사고팔리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주택이 없어서 주거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계급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라면 모두에게 즉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를 보시오.

파리 코뮌 150년

잠깐이었지만 사상 최초의 노동자 국가

김지윤

1871년 3월 18일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프랑스 파리가 노동계급에게 장악됐다. 이 위대한 경험은 비록 두 달여 만에 단명했지만(1871년 5월 28일까지 존속), 이후 노동계급의 투쟁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불어넣었다.

1870년 여름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연전연패를 했고, 마침내 9월 3일 스당 전투에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포로로 붙잡혔다. 나폴레옹이 권력에서 물러난 뒤, 프랑스는 공화국을 선포했고 부르주아 공화파 정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됐고 9월에 파리가 포위됐다.

공화파 정부는 파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프로이센에 포위된 4개월 동안 파리 대중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 갔다. 음식과 연료가 부족했고, 1871년 2월에는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실업난이 심각해 대중의 주된 수입원이 국민방위대 일당이었다. 사실상 모든 남성이 군대에 입대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프로이센에 맞서 파리를 방어한 것은 노동계급이었다. 파리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급진화됐다.

공화파 정부는 파리 시민들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려면 프로이센에 항복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1월 28일 휴전이 선포됐고, 3월에 급박하게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익 왕당파가 크게 승리했다. 반동적 왕당파인 아돌프 티에르가 정부 수반이 됐다.

티에르는 수도 파리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71년 3월 18일 티에르의 군대가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국민방위대의 대표를 탈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이고 아동들도 일부 포함된 대중이 정부군 병사들을 둘러쌌다. 장군이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병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티에르 정부군의 습격이 격퇴되자 우파 의원들은 파리에서 도망쳤고, 노동계급은 자신의 정부를 구성했다. 파리 코뮌이 탄생한 것이다.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다

파리 코뮌은 새로운 종류의 국가였다. 마르크스는 코뮌이 “의회기관이 아니라 일하는 기구였고, 행정과 입법의 업무를 겸했다”고 지적했다.(이하 별도 표시 없는 인용은 마르크스의 것)

파리 노동자들의 대표 기구로서 코뮌은 짧은 기간에 기존 체제의 오물을 벗어 던지기 위해 노력하고,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성취했다. 그 변화들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발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다.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선출되고 소환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 노동자 평균 임금 정도만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선거



최초의 노동자 국가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과 자유, 민주주의를 보여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1871년 파리 코뮌 지지자들의 바리케이드

권은 어떤 지배계급 성원이 의회에서 보통 사람들을 잘못 대표할 것인지를 3년이나 6년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뮌을 수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한다].”

코뮌은 상비군을 없앤 뒤 시민들을 무장시켰다.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184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파리의 거리는 안전해졌고, 어떤 종류의 경찰도 없었다”고 썼다.

빵집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체불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금지됐다. 문을 닫은 모든 작업장·공장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넘겨 주도록 했고,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착취한다는 이유로 전당포의 폐업을 명령했다.

모든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했다. 당시 파리의 어린이 3명 중 1명이 어떤 공식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종교가 교육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공장 근처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려는 최초의 노력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벗어났다.

코뮌은 국제주의를 표방했다. 나폴레옹이 노획한 대표를 녹여 만든 방돔 광장의 전승 기념비를 “배타적 애국주의의 상징”이자 “민족적 증오”를 부추킨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독일 노동자를 코뮌의 노동부 장관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였으며,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소유 계급에 맞서 생산자들이 벌인 투쟁의 산물이었으며, 노동의 경제적 해방이 이뤄진 곳에서 마침내 발견되는 정치 형태였다.”

코뮌은 여성 노동계급의 투쟁 역사에서 가장 영웅적인 무대 가운데 하나

이기도 했다. 비록 당시의 시대적 편견의 한계에 갇혀 코뮌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코뮌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파리 방어와 부상자 지원을 위한 여성동맹’이 결성돼 혁명과 코뮌을 지지하고 방어했는데, 이 단체는 제1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의 여성 분과이기도 했다. 한 극우 반동주의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습을 드러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로 물든 파리

그러나 이런 성과를 더 발전시키기에는 코뮌의 수명이 너무 짧았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쥐고 기성 질서에 도전하자 “구세계는 분노의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했다.” 지배계급은 결코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코뮌 지지자들은 지배계급의 권력 탈환 야욕을 간파했다.

당시 국민의회와 정부는 파리에서 약 20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에 있었다. “3월 18일 국민방위대가 베르사유로 진격했다면 공화정의 군대를 총 한 방 쏘지 않고 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코뮌은 프랑스 은행을 건드리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의 모든 금은 이곳에 있었으므로 코뮌이 금을 몰수했다면 티에르의 돈줄을 끊고 프랑스 경제를 위락파락할 수 있었다.

프루동주의와 블랑키주의의 재산권 존중 견해에서 기인한 코뮌의 관대한 덕분에 티에르는 자금을 모으고, 반격할 태세를 갖추 수 있었다. 얼마 전까지 프랑스 정부에 총을 겨눴던 프로이

센은 코뮌의 확산을 막는 데에서는 프랑스 지배계급과 이해관계가 같았고, 티에르가 군대를 모으는 것을 묵인했다.

1871년 5월 21일 “티에르와 피에 굶주린 그의 사냥개들”이 마침내 파리로 진격했고, ‘피의 일주일’ 동안 무자비한 학살을 벌였다. 티에르의 군대는 코뮌 지지자들이라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노동자들은 훗날 ‘코뮌 전사의 벽’으로 알려진 페르 라셰즈 공동묘지에서 묘비를 엄폐물 삼아 끝까지 항전했다. 3만 명이 넘는 파리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다. 코뮌 지지자들은 망명지에서도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파리 코뮌은 기존 국가가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야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노동계급과 국가

비록 패배했지만,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스스로 성취해야 하고, 노동계급은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코뮌은 노동계급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동적 참여로 생명력을 얻었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운영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코뮌의 교훈은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차지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될 수 없고, 그것을 분쇄하고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에서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기존 국가 기구를 접수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리 코뮌 이후의 역사는 국가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자본가의 계급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거듭 보여 줬다.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집단들인 기업주, 대형 은행, 고위 국가 관료, 군 장성들, 판검사들에게 있다.

그래서 좌파 정부들은 집권하면 기존 지배계급의 험박과 사보타주에 직면하거나 흔히 그 압력에 순응하곤 했다. 2015년 그리스의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가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에 굴복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다가 결국 무너진 것은 가장 최신 사례일 것이다. 1973년 칠레의 지배계급은 미국의 협조와 지원 속에 아옌데의 좌파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켰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은 집권하지도 않았는데도 지배자들의 전방위적 공격을 받다가 결국 밀려났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파리는 코뮌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의 영광된 선구자로 영원히 칭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닌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예행연습”이라고 평가했다.

파리 코뮌 이후에도 노동계급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 준 많은 혁명이 있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는 1928년 스탈린이 반혁명을 벌이기 전까지 노동자 권력이 파리 코뮌 때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로 등장했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은 파리 코뮌의 경험을 곱씹으며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근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기해야 한다.

미얀마

계엄에 맞서 파업·시위 결연히 이어지다

김준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40여 일 동안 대중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군부는 폭력 진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공식 확인된 수치만 따져도, 현재까지 약 150명이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유엔 추산).

3월 15일 군부는 양곤 서부 공단지대 흘라잉타야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 6개 구(區)에 계엄령을 발효했다. 이를 에 걸쳐 최소 56명을 죽게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간 매일같이 시위와 전투가 벌어지고 저항이 가장 활발한 곳들에 계엄령이 발효됐다.

이곳들에서는 파업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3월 8일 총파업 이후 몇몇 노동조합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거리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군경과 매일같이 전투를 벌였다. 14일에 흘라잉타야에서는 파업 중인 의복 제조 노동자들과 군경이 충돌하는 와중에 몇몇 공장들이 불타기도 했다.(방화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직후 군부는 계엄을 선포했다. 군부는 “질서 회복” 운운했지만, 이제껏 가정집과 상점을 가리지 않고 침탈한 것도, 멸망한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들이 불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고 마구잡이 총질을 했던 것도 바로 군인·경찰·보안대였다.

하지만 계엄으로도 저항을 멈추지 못했다. 양곤·만달레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계엄령 발효 이후인 15일과 16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의료·철도·은행·섬유 등 노동자들도 파업을 이어 가며 거리 시위에 참가했다.

몇몇 부문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 파업에 동참했다. 한국 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서해에서 운영하는 슈웨 가스전 노동자들도 약 60명이 15일에 파업을 벌였다.

끈질긴 대중 저항이야말로 군부가 한 달이 넘도록 정국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다. 거리의 전투뿐 아니라 파업이 계속되면서 정부 재정과 교역에 타격이 있기도 하다. 일본 기업 기린홀딩스, 타이 건설 기업 아미타,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등 몇몇 기업들이 기존 투자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국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군부는 상황을 장악하려고 잇달아

강경책을 내지만 뜻대로만 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유혈 진압이 계엄으로 이어지는 최근 며칠 새 군부의 진압 명령에 불복하며 인도로 망명하는 경찰관과 보안 부대 사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AFP〉 등은 보도하고 있다.

이런 균열의 조짐을 봐도 쿠데타에 맞서는 대중 저항에는 군부를 더한층 궁지에 몰아넣을 힘이 있다. 미얀마인들은 군경의 폭력에 맞서 조직적으로 스스로 방어하며 대중 파업과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대중 저항

하지만 아웅산 수치의 정당 민족민주동맹(NLD) 정치인들은 그런 방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임시 국회 ‘연방의회대표자위원회’(CRPH)는 군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얀마 국민을 지키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소수민족 무장 집단들을 “연합군”으로 편성할 것이고 “유엔이 계속 개입을 주저한다면 ‘원치 않지만 해야 하는’ 다른 방법[내전]을 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편성하겠다는 “연합군”은 미얀마 내 10여 개 소수민족 무장 집단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 무장 집단들은 2월 말에 미얀마 군부와의 휴전 협정을 파기하고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접전을 벌여 왔는데, 전투기까지 동원한 군부의 반격에 고전하고 있다. 이들이 불교·버마 민족주의가 강력한 민족민주동맹과 “연합”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동맹이 가리키는 방향의 위험성이다. 민족민주동맹은 “국제 사회” 개입을 중시하며 대중들의 투쟁은 자제시키려 애써 왔다. 역사에는 “국제 사회”(제국주의 강국들)의 개입으로 민주주의 투쟁이 왜곡되고 또는 그 결과 잔혹한 독재자들이 권력을 부지한 사례가 가득하다.(관련해 6~7면을 보시오.)

CRPH가 “혁명”을 선언하기 훨씬 전부터 평범한 미얀마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고 군부의 공격에 맞서 왔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낳을 힘은 여기에 있다. 거리 저항을 지속하면서 무기한 대중 파업을 심화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쟁적 리더십이 형성돼야 하고 이는 정당방위 조직으로 이어져야 한다.



3월 14일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 출처 Myanmar Now

문재인의 “제재,”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된다

3월 12일 문재인 정부가 미얀마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언론들은 이를 “이례적 독자 제재”라며 추켜세웠지만 실상은 제스처에 가깝다.

정부는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결정인데, 외교부 자신도 밝혔듯이, 이미 2019년 1월 이래로 군용물자 수출은 전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한국산 물대포가 쓰인다는 비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국방 관련 신규 협력을 중단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2월 이후 미얀마 무역부에서 해외 신규 투자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출국 시한이 넘어도 귀국을 원치 않는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장한 관련 비자(G-1)는 강제 추방만 하지 않을 뿐 그밖의 지원이나 권

리가 보장되는 게 전혀 없다. 지원도 없고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라서 취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이미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강제 추방은 않겠지만 단속과 강제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인들(개중에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에서 운동하다 군부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있다)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충분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주판알

이런 조처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와 거래해 온 한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미사여구보다 훨씬 우선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의 사업적 연계를 진지하게 끊으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남아 진출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

다. 문재인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얀마에 경제협력기금 10억 달러를 약속했다. 정부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LH의 첫 해외 직접 투자 사업처로 삼은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것도 시사적이다.(문재인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한 3월 6일도 미국 상무부의 제재 협박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성명 통과 직후 미국 상무부 안과 수준을 맞춘 조처를 발표한 것이다.

그 직전에 문재인 외교부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작성했던 영국 외교부와 통화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요컨대, 정부의 조처는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에 더 무게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한국의 진보·좌파의 전진에도 미얀마의 민주주의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5만 원 ☐ 기타 () 원(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이메일

농협 301-0010-1643-71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타이 사회주의자 초청 토론

쿠데타와 대중 항쟁 — 기로에 선 미얀마

이 글은 3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쿠데타와 대중 항쟁, 기로에 선 미얀마'에서 **자일스 자이 웡파콘** (아래 사진)이 한 발표와 정리 발언을 기사로 옮긴 것이다. 웡파콘은 미얀마와 이웃한 타이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2006년 타이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웡파콘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이 토론회를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가이자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대중 항쟁은 현재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60명 넘는 사람들이 군부에 사살됐는데, 셋 중 하나는 10대 청소년들입니다.

미얀마 항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온 청년 항쟁 물결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청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항쟁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군부에 맞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것인가? 둘째, 시위대가 탄압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미얀마 항쟁은 이른바 '색깔 혁명'이 결코 아닙니다. 그간 서구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의 가짜 민주주의를 기꺼이 옹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내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단결해 군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항쟁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항쟁임을 보여 줍니다. 이 항쟁을 '색깔 혁명'으로 치부하는 것은 미얀마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입니다.

투쟁과 리더십

시위대가 비폭력·불복종 전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피억압 대중의 폭력과 억압자들의 폭력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이는 억압자들인 군부의 폭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의 정당방위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중 행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무장 투쟁 전술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미얀마에서 '8888' 항쟁[군부 독재에 맞서 1988년 8월 8일에 벌어진 대규모 항쟁] 이후 학생들이, 또 여러 소수 민족 단체들이 정부에 맞서 그런 전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미얀마인들이 군부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투쟁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쿠데타 직후, 미얀마 곳곳의 병원 100여 곳에서 간호사, 의사,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철도 노동자들, 은행 노동자들, 공무원들, 구리



군부는 계속해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월 초 양곤의 거리에서 시위 진압을 준비하는 군인들

광산 광원들도 파업과 '시민불복종운동(CDM)'에 합류했습니다. 운동 참가자들은 이웃한 타이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했습니다.

2월 22일, 미얀마 전역에서 노동자 2000만 명이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이 항쟁이 '색깔 혁명'의 일종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최근에는 무기한 총파업 호소도 있었습니다(그전까지 총파업들은 무기한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호소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긍정적인 사태 전개입니다.

파업은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는 데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경제 체제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사들이 거리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수단·벨라루스·홍콩 등의 사례를 봐도, 노동자 파업과 시위가 결합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타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종식시킨 것도 계속된 노동자 파업이었습니다.

수단·벨라루스·홍콩에서도 파업



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나라마다 달랐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효과적인 무기이긴 해도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듯 아무 때나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력(리더십)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개혁이나 혁명이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에 뿌리 내린 혁명적 정당을 건설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미얀마의 개혁주의자들은 그저 쿠데타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체제는 가짜 민주주의였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국가 수반이지만 군부에 여전히 권력이 있는 체제 말입니다.

하지만 혁명가들은 훨씬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파업으로 군사 정권을 분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웅산 수치

아웅산 수치는 현재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입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수치의 석방을 요구하고, 또 모든 정치수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수치가 수많은 미얀마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치가 결코 미얀마에 해방을 가져다줄 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수치가 오랫동안 군부와 타협해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운동을 동원해 제시키는 구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8888' 대중 항쟁 때 학생·승려·노동자들이 군부에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8월 23일에는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그 3일 뒤에 수치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열린 50만 명 규모 시위에

서 연설했습니다. 수치는 50만 명에게 군부를 증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군부가 수십~수백 명을 사살한 직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운동이 승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수치는 운동을 동원 해제시킴으로써 운동을 패배로 이끌고, 향후 20년 동안 군부 독재가 이어질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날 수치의 연설은 수치의 자서전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는 지난 5년 넘게 가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2008년 개정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의회 의석의 25퍼센트를 선거 없이 지명할 수 있고, 내각 핵심 부처를 장악하고 있고, 정부가 내린 어떤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수치가 국가 수반으로 있는 동안 미얀마에는 정치수가 200명이 있었고, 군부가 제정한 억압적 법률들이 있었으며, 수치 자신도 여당 민족민주동맹(NLD) 안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수치가 민주주의 투쟁의 지도자여서는 안 되는 둘째 이유는, 수치가 인종 차별주의자이고 무슬림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군부가 로힝야 무슬림들을 학살했을 때 수치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관련 기사 본지 224호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군부의 인종차별, 아웅산 수치의 외면, 미·중 제국주의의 위선이 낳은 비극'] 수치는 자기 정당 민족민주동맹에서 무슬림이 요직을 맡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치는 소수 민족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수치는, 카렌족들은 보모 일이나 해야 할 사람들이고 카친족들은 불교를 믿지

않고 잡신이나 섬기는 미개한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수치의 자서전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족 문제

미얀마에서 민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국은 식민 통치 시절에 분열 지배 전략을 이용해 — 제국주의답습니다 — 버마(오늘날의 미얀마)에서 여러 민족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럼에도 버마 북부 지역을 온전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민 통치가 끝나고 버마를 차지한 것은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 같은 불교·버마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도계를 비롯한 다른 민족 집단에 대해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내 수많은 소수 민족 집단들은 버마 민족주의자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아웅산 수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군부에 맞서 일시적으로 연합하긴 했지만, 수치가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총칼로 위협해 미얀마를 단결시키려 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1962년, 군 장성 네 윈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1988년까지 이어진 군부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네 윈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당시 군부는 미얀마 국가가 여러 소수 민족들에 너무 많이 양보할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윈은 우익 민족주의 운동 출신이었지만, 쿠데타 후 그가 수립한 정권은 스탈린주의적 민족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은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억압에 맞선 소수 민족



사진 출처: Kang Sa / MPA

시위대가 스스로를 지키고 군부에 효과적으로 맞설 방법은 무엇일까? 3월 16일 양곤의 시위대

들의 무장 투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8년 항쟁 이후 미얀마 군부는 네 원을 사임시키는 등 통치 형태를 일부 바꿨지만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국제 사회”

지금 미얀마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얀마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업과 대중 시위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중국 모두 이른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식 로드맵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드맵’의 결과가 바로 미얀마의 가짜 민주주의였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지만 선거가 얼마쯤 허용되고 아웅산 수치가 집권하게 된 그 체제 말입니다.

모든 제국주의 열강은 미얀마가 이런 허울뿐인 민주주의 하에서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열강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 자유 · 자결권을 쟁취할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쟁을 지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군부 독재를 기꺼이 용인합니다. 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사례입니다.

또, 서구 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르면 민주주의 운동들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구 제국주의는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억압하는 인종차별적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리라 기대한다면 이는 커다란 실수일 것입

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스〉는 아웅산 수치가 군부와 충분히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수치를 비난했습니다.(그런가 하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 급진적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 아웅산 수치가 군부에 지나치게 많이 타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진정 우려하는 바가 ‘안정’과 허울뿐인 민주주의일 뿐임을 시사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를 봐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국제 사회”의 압력과 제재 때문에 종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자신들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한 이를 얼마든지 용인했습니다. 결국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무너진 것은 대중 파업과 학생 시위 덕이었습니다.

중국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과 결합하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아웅산 수치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중국 자본주의에 득이 될 여러 협정을 중국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꼭 달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쿠데타 때문에 고심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 측 대표가 미얀마 군부 수반을 만나, 미얀마 군부가 중국의 석유 · 천연가스 수송관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 모두 제국주의 강국들입니다. 중국은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구르인들과 티베트인들의 권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스스로 해방되는 데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조직과 투쟁으로 군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와 이웃한 타이로 보면, 군사 정권에 맞서 분출했던 대중 운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타이 운동의 많은 운동 지도자들이 왕정에 문제 제기하고 군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실형을 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힘을 활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웅산 수치를 대신할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려면 운동에 더 혁명적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혁명적 지도력은 소수 민족의 자결권을 중심으로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군부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을 더한층 다질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미얀마 항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그저 흥미로운 국제 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미얀마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만도 아닙니다(물론 미얀마인들이 겪는 탄압은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롭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나 혁명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사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투쟁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투쟁의 요구를 얼마나 밀어붙일 것인지, 기후 재앙, 경제 위기, 코로나 19가 낳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서 모두 ‘개혁이나 혁명이냐’ 하는 물음이 제기됩니다.

우리 각자가 사는 나라들에서도,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력 문제, 혁명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발언

흥미로운 토론 감사 드립니다.

우선, 무장 투쟁과 파업의 관계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업이 먼저고 무장 봉기는 나중 문제다 하는 식으로 단계론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 맥락에서, 무기한 총파업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총파업이 무기한으로 벌어지면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지배자들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 와중에도 식량과 연료가 분배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위원회가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겠죠. 파업위원회가 대안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정당방어를 위해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장 투쟁을 국가 전복의 핵심 전술로 채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중 항쟁이 무장 봉기로 귀결되는 것이 초래할 위험은 시리아 항쟁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아랍의 봄’ 식의 대중 항쟁이 없었던 탓에, 결국 시리아 항쟁은 제국주의 열강이 개입해 그들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 간의 내전으로 변질됐습니다.

무장 투쟁과 파업

김대중에 관한 발언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김대중과 아웅산 수치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모두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아웅산 수치 지지자들, 민족민주동맹 지지자들이 벌이는 시위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안적 · 혁명적 지도력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미얀마에 국가 전복을 추구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운동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듯합니다.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이나 ‘8888’ 항쟁 세대들의 영향을 받는 몇몇 노동자 조직들이 아웅산 수치의 지도력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미얀마에서 혁명적 단체 존재하지 않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미얀마 항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미얀마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는 나라들에서 우리 자신이 벌이는 투쟁을 위해서도, 혁명적 지도력의 필요성에 관해 계속 말해야 합니다.

세계 어디서 벌어지는 투쟁이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 투쟁을 분석하고 미래의 투쟁을 위한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로힝야족 탄압

로힝야족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로힝야족은 제국주의의 꼭두각시가 절대 아닙니다. 로힝야족이 고통받고, 살해되고, 강간당하고, 미얀마에서 추방돼도 다른 나라들이 받아 주지도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분명 미얀마 군부와 아웅산 수치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몇몇 서방 국가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로힝야족의 편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힝야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서방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호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들 모두 난민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억압받는 이유는, 미얀마 지배계급의 극단적 불교 · 버마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극단주의적 불교 승려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승려들은 무슬림을 배척하고,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자 버마족을 위한 나라이길 바라고, 다른 소수 민족들을 탄압하고자 합니다.

한 분이 쿠데타가 미얀마 군부의 오판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군부는 매우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오만해졌을 수 있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총선 압승에 힘입어 군부의 이권 일부를 빼앗으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쿠데타를 감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군부의 이권은 정치 권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큼니다.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기업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승리

미얀마 항쟁에 걸린 판돈이 굉장히 큼니다.

군부가 권력을 부지한다면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고, 탄압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미얀마 항쟁이 승리해 군부가 오판했다고 입증한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미얀마에서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를 거둔다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는 세상의 모든 개혁은 혁명적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 해도 그 승리는 여전히 가치 있을 것이고, 미얀마인들은 — 아웅산 수치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입맛에 맞는 ‘개혁’이 아니라 —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초청해 준 노동자 연대 동지들과 통역해 준 천경록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핵발전이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장호중

이 기사는 3월 12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축약하고 다듬은 것이다.

핵발전이 기후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인데, 그 대부분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발전 부문이다. 수송이나 열에너지 필요로 하는 각종 산업, 난방 등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대부분 전기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발전 방식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이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 대체에너지원 목록에 핵발전도 포함시키려 한다. 특히 기후 운동 내 저명한 일부 학자들과 활동가들도 핵발전 불가피론을 퍼 운동 내에서 논쟁이 벌어져 왔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핵발전이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핵발전 비중을 늘려야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 출신의 과학자로 기후 변화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제임스 한센,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러브록, 《6도의 악몽》을 쓴 마크 라이너스, 《CO2와의 위험한 동거》를 쓴 조지 몽비오 등이 핵발전 불가피론을 퍼 왔다.

빌 게이츠

국내에서는 월성 핵발전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우파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때마침 출간된 빌 게이츠의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중 핵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대서특필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핵발전소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조선일보〉 등이 빌 게이츠의 주장을 왜곡했다며 빌 게이츠를 옹호한다. “인류 사회 전 영역에서의 변화와 기술혁신을 촉구했던 게이츠의 주장은 오로지 원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만양 납작해졌다.”

그러나 빌 게이츠의 주장은 핵발전 말고도 문제가 많다. 빌 게이츠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기후 위기를 막는 방법에 골몰한다. 자기 같은 자본가들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 말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주들의 기후 대응 투자를 고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윤을 쌓아 올린 기업주들에게 벌이 아니라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발전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송 분야에서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인 기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 자신이 “집도 크고 심지어 개인 전용기까지 가지고 있지만 2020년 지속가능한 제트연료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2021년 우리 가족이 비행을 하면서 내뿜는 탄소를 완전히 상쇄할 것”이라고 한다. 그 ‘상쇄’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뤄질 것이고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에 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기 중 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기술은 여전히 효율이 극도로 나빠,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하느라 배출한 온실가스 양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일부 기업들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외에는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개발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빌 게이츠의 책은 자본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책임지는 몰라도, 기후 위기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책은 못 된다. 그의 핵발전 옹호론도 오래된 거짓말, 속임수, 왜곡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 위기의 위협이 너무 큰 나머지 일부 환경운동가들조차 핵발전 불가피론에 이끌리고 있다

핵발전 옹호론의 거짓말들

①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바람이 멈추면 풍력 터빈은 멈추고, 밤이 되면 태양광 패널은 전기를 만들지 못하니 이런 주장은 일부 진실일 것이다. 또 어떤 지역은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반면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니 지역 간, 국가 간 불균등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에는 풍력과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다. 조수 간만의 변화(조

력)나 파도, 지열을 이용한 발전은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더 큰 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수백~수천 개의 반사판을 설치해 햇빛을 모으는 태양열 발전도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다.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지구 전체로 보면 언제나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므로 풍력과 태양광도 사실상 24시간 가동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고 서로 경쟁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처럼 효율적인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유엔 기후협약은 전력망 공유는 고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추상적 합의를 하는 데에만 수십 년을 까먹었다. 이 점은 ‘그린 뉴딜’ 정책들의 한계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② 탄소배출 제로?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기 위해 거대한 산을 깎아내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우라늄은 매우 희귀한 원소다), 이를 정제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연료가 사용된다.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80퍼센트를 만드는 미국 켄터키주(州) 파두카에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두 개의 오래된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 각각의 설비용량만 해도 1000메가와트로 어지간한 핵발전소 규모와 맞먹는다. (헬렌 칼디코트, ‘핵발전의 신화’, 영국의 혁명적 좌파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06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7년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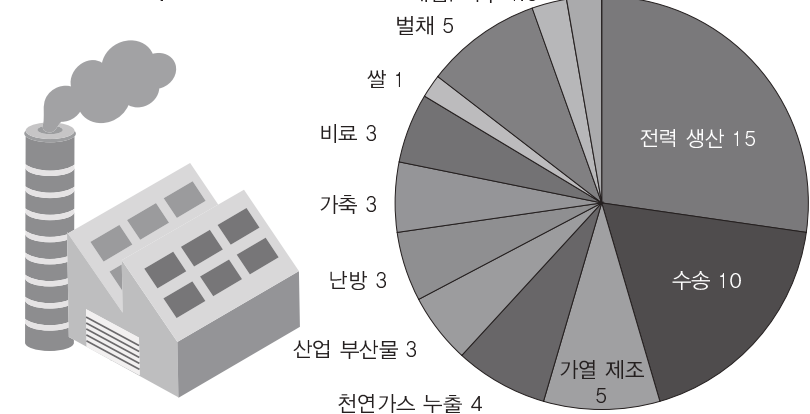
전’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소는 1킬로와트시당 탄소 35그램을 배출한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벤자민 K. 소비쿨 교수 등이 2008년에 발표한 ‘핵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비판적 연구’는 핵발전의 탄소 배출량을 1킬로와트시당 1.4~288그램(중간값은 66.08그램)으로 추산했다(아래 그림2).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풍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은 9~10그램, 화석연료 발전소의 배출량은 443~1050그램이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4년 보고서에서 그 양을 3.7~110그램으로 보고한 바 있다.

마크 제이콥슨은 2019년 ‘지구온난화, 대기 오염, 에너지 안보에 대

한 핵발전의 평가’에서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핵발전소 건설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핵발전은 육상풍력 대비 9~37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림1.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억 톤eqCO₂)



출처: 조너선 닐, Fight the Fire: Green New Deals and Global Climate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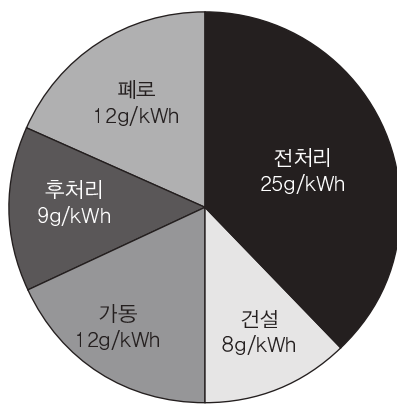


그림2. 핵발전 주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핵발전 신기술은 대안 못 된다

4세대 핵발전, 진행파 반응로, 핵융합

방사성 물질을 적게 만들어내고, 사고 위험도 적으면서도 저렴한 핵발전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압형 경수로 등 2세대 핵발전 이후 개발된 기술들 중에 상용화 단계에까지 도달한 기술은 없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테라파워의 ‘진행파 반응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이 발전소는 아직 설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념대로라면 이 발전소에서는 핵분열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전에는 폐기물로 여겨지던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이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해 가동된다. 연료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는 뜻에서 ‘증식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유도하려면 냉



사고가 반복돼 폐쇄된 몬주 고속증식로

각제로 액체나트륨을 사용해야 한다. 액체나트륨은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한층 정교한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이 발전소는 60년 동안 연료봉 교체 없이 자동으

로 운전돼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고온에 노출되는 각종 구조물들이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진행파 원자로 기술 타당성 분석’, 2011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 운영하려던 일본의 몬주 고속로는 수십 년 동안 시험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액체나트륨 누출 사고가 반복돼 2013년 최종 폐쇄됐다.

이런 기술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이런 신행 핵발전소가 전 세계에 두루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융합에 대해서라면 빌 게이츠 자신이 인용한 관계자의 말이 잘 보여 주듯이 “앞으로 40년은 더 남았고, 아마도 항상 40년 남을 것이다.”

③ 안전하다?

어처구니없게도 빌 게이츠는 핵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수보다도 적다며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는가 하면 핵발전처럼 개인의 회피 노력이나 통제력이 결과에 거의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교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다. 어떤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후쿠시마에서처럼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이 이주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자동차 사고는 차도에서 떨어져 있으면 대체로 안전하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은 그런 종류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 아니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방사선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연구는 미국과학아카데미가



후쿠시마 사고 현장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는 건 속임수일 뿐

미가 2006년에 발표한 것이다. 이 기구는 민간기구이지만 하원의 결정에 따라 설립됐고 미국 연방정부에 과학 정책을 자문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피해자 12만여 명과 다른 방사선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주 낮은 방사선 노출에서도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저선량 전리방사선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도: BEIR VII - 2상》

방사성 물질은 입이나 코, 눈, 피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데, 이 경우 체외 방사선 피폭과 달리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그 효과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각국 정부와 IAEA 등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숨기고 조작해 그 규모를 최소화해 왔는데, 1959년 IAEA와 국제보건기구(WHO) 사이의 협정은 그런 노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WHO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려면 사실상 IAEA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올리버 티켈, 영국 일간지 〈가디언〉, 2009년 5월 28일자)

④ 비용이 적게 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비용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는 2025년까지도 핵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비용 추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핵발전소 폐로 비용을 석탄 발전소와 같은 전력 생산량 1테가와트시당 0.03달러로 계산했다. 이는 핵발전소의 수명이 길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사실상 방사

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류가 콘크리트나 철 구조물 등을 사용한 지 수백 년밖에 안 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폐기물을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엄청나게 말해 아직 알지 못한다.

IEA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이라도 미국, 중국, 프랑스, 인도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핵발전소보다 더 경제

적이다.

후쿠시마 사고 등이 보여 주듯이, 대형 사고라도 나면 그 처리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 비용이 약 826조 264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처리 기간을 30~4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계획대로 댔을 경우의 얘기다.

핵발전과 제국주의

이토록 위험하고 비싼 핵발전을 지배자들이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핵에너지는 전기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 태어났다.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6년이 지나서야 핵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 시작했다.

“1953년에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했을 때,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 양산 체제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원전을 운영·확대하고자 기를 쓰는 것은 결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야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故 김중철 《녹색평론》 발행인)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핵산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60~2008년에 핵발전에 지급된 각종 보조금이 같은 기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가격의 140퍼센트에 이른다.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 2011)

자본가들이 이런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자국 군사력이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다.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안전 비용을 누락하는 것도 용인되는 이유다.

오늘날 일부 탈핵 활동가들은 이처럼 핵발전이 근본에서는 핵무기 개발 노력임을 지적하는 데 소홀하다. 이는 주류 환경운동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와 제국주의에 도전하지 않고 심지어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물론 이들이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의 일탈 아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작동 방식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 변화나 핵발전이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에서 비롯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기업들이나 정부의 일탈로 보고 체제 내에서 교정 가능한 문제라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환경 엔지오나 녹색당 등은 로비나 입법 지원, 혹은 선거에 직접 출마해 국회·정부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양이원영 의원은 그 최근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기후 변화나 핵발전 문제는 커녕 어지간한 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체제가 낳은 결과’라는 인식이 아직 체제 자체에 맞서지는 않는 운동에 불참하는 핑계가 돼선 안 되겠지만, 그 인식 자체를 회피하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특히 화석연료와 핵발전은 그 규모와 지배자들에게 있어서 중요성을 봤을 때 체제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살아 있는 사자의 가족을 벗기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트럼프는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고무했지만, 바이든은 파리 협약에 가입하고는 화석연료 사용을 방치한다.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모두 여러 차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화석연료와 그 최대 매장지인 중동을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는 월성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문재인은 월성 핵발전소를 폐쇄하고는 나머지 24개 핵발전소를 그대로 가동한다. 4개는 추가로 건설중이고, 2개는 건설허가가 보류된 상태다. 박정희는 대놓고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미국의 반대 때문에 포기해야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적발돼 IAEA의 사찰을 받은 바 있다.

즉, 지배자들은 말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와 자국의 경쟁력을 위해 같은 선택을 한다. 이들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지 못하면 기후 위기라는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서 핵발전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혹은 탈핵을 위해 석탄 발전까지는 아니어도 가스 발전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나아가든 기후 변화와 핵발전 모두 제때 막지 못할 것이다.

지배자들이 화석연료와 핵무기들 중 하나라도 포기하게 하려면 그들의 수중에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한다. 이는 거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대중 행동을 건설하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운동들 속에서,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지 말고 선진적인 사람들을 규합하는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

쌍용차 부도 위기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 필요하다

박설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쌍용차는 미국 HAAH 오토모티브로 매각을 성사시키겠다고 일단 부도를 피하고 시간을 벌었지만, 협상은 약속 시일을 이미 넘겼다. 최종 인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09년 쌍용차 부도와 협력업체 줄도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 여부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이 매각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다. 사용자 측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도 노동자 희생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같은 '자구안'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 일자리 보호는커녕, 되레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쌍용차가 매각된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결코 나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휴지 조각이 된 정부의 일자리 보호 의지 1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외면하는 이동걸 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서한을 찢어버리고 있다

노동자 희생 요구하는 정부

이런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쌍용차가 부도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복돼 왔다. 역대 정부들은 쌍용차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기업주와 채권단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뿐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했다.

가령,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쌍용차를 '먹튀' 가능성이 높은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은 비극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정부는 워크아웃 기간에 쌍용차에 1조 2000억 원을 쏟아붓고는, 투입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상하

이차로 매각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상하이차가 부도를 내고 떠날 때도 마지막까지 지분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이듬해 쌍용차를 마힌드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 2009년에만 3000여 명이 해고됐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일부는 가정이 파탄 나는 아픔을 겪었고, 노동자와 가족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간신히 일자리를

지킨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 받지 못했다. 지난 11년 동안 거듭 임금이 깎이고 노동강도가 세졌다. 2019년에는 두 차례 '자구안'을 시행해 성과급·상여금 반납, 기본급 동결, 각종 복지의 대폭 축소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운동 내 일부는 쌍용차 위기의 원인을 "외국 투자기업의 특수성"(<매일노동뉴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대안으로 '먹튀 방지법' 등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상하이차나 마힌드라 등의 '먹튀'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단지 해외 자본의 '먹튀' 문제로 다루는 것은 협소한 접근이다.

해외 기업에 매각되기 전에도 쌍용차는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됐다가 1999년 대우그룹 부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이 시작됐다. 반복되는 쌍용차 위기가 1997년 IMF(를 부른) 경제 공황, 2008년 세계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유례 없는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침체는 점점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동안,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체인 쌍용차는 심각한 위기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냉혈한 자본주의 시장 논리 속에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삶을 보호받지 못한 채 끔찍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따라서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체제의 시장 논리에 도전해야 한다.

일시적 국유화는 고용에 도움 안 된다

앞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위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다. 쌍용차 노사가 스스로 희생 방안(매각이나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 등 노동자 희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쌍용차 위기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하고, 마힌드라에 매각한 것은 정부가 법정관리로 쌍용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졌다.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국가만이 이를 위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기업주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왔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경제침체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기업 파산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돈은 기업주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기업주가 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쌍용차를 소유·운영하는 국유화만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제기하며 투쟁하는 것은 쌍용차 일자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정치 이슈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거나 모종의 사회주의적 조처라고 환상을 가져서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보호라는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국유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유화 요구는 기업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방식이기도 하다. 기업주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부도를 내면 정부가 경영주와 채권단이 갖고 있는 지분을 무상으로 몰수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부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노동운동 내에서도 대안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월 중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산업은행의 출자 전환, 일시 국유화, 쌍용차·한국지엠·르노삼성 등 해외투자 완성차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공기업화하자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매각을 위한 기업 희생

이런 주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말고 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 제기된다. 그럼에도 당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령, 일시 국유화는 말 그대로 쌍용차가 매각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만 국유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이나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등 과도 결합되곤 하는 법정관리를 뜻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국 정부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이 쌍용차 지원의 대가로 노동자 희생을 요구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일자리 보호와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시 국유화는 매각을 위한 기업 희생을 목적으로

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해고와 조건 약화가 수반된다.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2009년 쌍용차 법정관리 하에서 대량해고가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을 전제하는 일시 국유화가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국유화 요구가 필요하다.

일부 좌파는 해외투자 완성차 업체들을 공기업화하는 산업 국유화(조선·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다)를 대안 경제 모델(강령)로서 제시한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국유화(혹은 국가자본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화나 국가 통제는 노동자들에게 반복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산업 국유화를 주장하는 일부 좌파는 단위 기업 차원의 국유화 요구와 투쟁을 중시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당면한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전술) 제시를 회피하는 것이다.

산업 국유화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외투기업 3사를 통합한 공기업을 만들어서 규모를 키워야 전기차·수소차 등 생산으로 전환하기가 용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도 본다.

그러나 해외 투자기업들을 통합해 공기업으로 만들더라도 국내적·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치열한 경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속에서 통합 공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은 또 다시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노동운동은 기업의 경쟁력, 시장 경쟁력 논리에 정면 도전하면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국유화 요구를 성취하려면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투쟁이 결정적이다. 당장 우리 눈앞에 국유화 요구를 성취할 강력한 투쟁이 분출하지 않더라도, 혁명적 좌파는 참을성 있게 산업 현장에서 그런 투쟁을 이끌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라질: 위기 심화 속
룰라의 정계 복귀

브라질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7만 명을 넘었다. 이를 능가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물론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영국과 다른 유럽 나라들이 더 높다.

그러나 브라질 대통령이자 극우 포퓰리스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팬데믹을 더 악화시켰다. 코로나19의 위협성을 부정하고 백신에 반대하는 보우소나루는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기꺼이 내버려 뒀다. 그 탓에 감염력이 더 높은 코로나19 변이(P.1)가 아마조나스주(州) 마나우스시(市)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쉽사리 퍼질 수 있었다.

이제 보우소나루는 전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의 잠재적인 정치적 도전에 직면했다. 룰라는 1980년에 급속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노동자당(PT) 창당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2000년에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한 룰라는 전임자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지속했다. 그러나 빈민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보우사 파밀리아”(빈민 가정 소득 보조 정책)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한 룰라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협상에 기댔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뇌물이 따를 때가 많았다.

룰라는 나중에 이런 노선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칙을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원칙도 협상할 줄 알아야 한다. 저기 국회에 있는 자들과 협상을 한다. 그자들이 도둑놈들이라 할 지라도 표결권을 쥐고 있으면 그걸 좀 달라고 부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는 거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정치 부패에 얽혀 들어간 탓에, 룰라 재임 당시 정부장관이었고 룰라의 후임자였던 지우마 호세프가 날아갔다.

2012년 대선에서 빈민의 지지를 얻고 당선해, 룰라 정권을 이어받은 호세프는 가혹한 긴축 정책을 폈다. 그러다 “라바 자투”(세차장) 스캔들이 터졌다. 거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가 정치인들의 대규모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 세르지우 모루

는 이 사건을 정쟁의 무기로 삼고 언론을 적극 활용했다. 《뉴 레프트 리뷰》의 페리 앤더슨은 그 작전의 논리가 노동당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나머지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세심한 분석을 통해 보여 줬다.

호세프는 2016년에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호세프의 뒤를 이은 우파 대통령 미셰우 데메르도 세차장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기소

그러자 모루는 룰라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 처음에는 징역 9년형, 그 다음에는 12년 형이 선고됐다. 누명을 씌운 것임이 거의 확실했지만 이 판결 때문에 룰라는 2018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그의 엄청난 인기를 보건대 그때 출마했더라면 당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우소나루의 팬데믹 대응에 비춰 보면, 룰라가 누명을 쓴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브라질의 마르크스주의자 발레리우 아르카리는 얼마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룰라의 투옥은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룰라는 정치적 소양과 경험이 있는 노동계급 부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들은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준다.

“룰라가 감옥에서 썩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배 계급의 힘을 입증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우소나루가 대선에 도전할 수 있었다. 무명의 국회의원이었던 보우소나루는 1964~1988년 브라질 군사 독재를 옹호한 자로 주로 알려져 있었다.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사회에 깊게 뿌리 박은 인종차별에 호소하려 했지만, 부패와 강력 범죄를 향한 광범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기꺼이 보우소나루를 밀어 줬다. 노동자당의 더 높은 복지 지출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는 자신의 우상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제멋대로이고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재무장관 파울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루 게이지스의 약속과 달리 신자유주의를 더 심화시키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룰라는 자유의 몸이 돼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룰라는 580일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청원 끝에 2019년에 석방됐다. 이제 한 대법관은 룰라의 유죄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물론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룰라는 이미 정계에 복귀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은 룰라가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앤더슨은 브라질 정치학자 안드레 신제르를 인용해 노동자당이 기껏해야 “미약한 개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황폐화된 브라질에서 그 정도면 충분한 것일까?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6호 / 번역 이원웅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점거 투쟁에 나선 부품사 회원 노동자들
광주형 일자리 “선도 기업”의 추악한 민낯

★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을 재개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

★ LG트윈타워 해고 노동자 농성
100일 — 즉각 복직시켜라



사진 출처 Palácio do Planalto(룰라)

이것으로 충분할까?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부패 혐의에서 풀려나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경제·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증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임준형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이다.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동안 더욱 악화됐다.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019년 5월보다 1.7퍼센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2.1퍼센트 증가했다. 취업시간이 주 50시간 미만이거나 일시 휴직한 비율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의 고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이 0.5퍼센트 증가한 것에 견줘 변화 폭이 더 크다.

또한 외국인 임시·일용 근로자가 12.4퍼센트 감소했다. 결혼이주여성과 난민, 건설업의 중국동포들이 주로 해당될 것이다.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 취업한 직종은 국민 일반보다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직 비중



이주민 차별 개선 않는 문재인 정부 지난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적 정책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

은 높다. 특히 일용직 비중은 훨씬 높다(〈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또, 난민은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이런 지표들은 이후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비한 안전망도 취약하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54.3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이

주민·난민 등 약 170만 명을 배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가 이주·난민 단체들이 항의해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가 나오자 약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은 제외했다.

이주민 차별, 방역에 해롭고 자본가들에게만 이득

방역 사각지대 이주민, 알고도 방치하는 정부

많은 이주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낸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2020)를 보면, 내국인의 외래진료 이용률은 약 85퍼센트인 반면 이주민은 32퍼센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입원과 응급실 이용률은 두 집단이 거의 같았다. 이주민은 아파도 참다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난민 등 더 열악한 처지의 이주민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체류 중인 한 나이지리아 난민은 설문지에 이렇게 썼다.

“건강보험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는 무료진료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무료진료소가 문을 닫아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머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일반 병원은 비용 때문

에 갈 수가 없어 다시 무료진료소가 시작되기만을 바라면서 버티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의 감염이 증가했다. ‘3밀’(밀집·밀접·밀폐)을 피할 수 없는 공장과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주노동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이주와 인권 연구소)를 보면, 평균 2.4명이 침실을 함께 쓰고, 한 방에 4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14.7퍼센트였다. 응답자 30퍼센트 이상이 실내 욕실이 없고, 비좁고,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문이 없다는 응답도 9퍼센트였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정세균 총리는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자 이렇게 말했다. “밀폐된 생활 공간과 방역 물품 부족 등 일단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으로 우리의 경우도 [싱가포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땀질 처방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방역 환경, 주거 실태를 “현황 점검”하겠다고 했을 뿐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규제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숙소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땀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한편, 최근 서울시, 대구시, 경상북도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사용자들에게 내렸다. 심지어 경기도는 검사를 받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도 200~300만 원 벌금과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권위주의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자 지난 주말 경기도의 선별진료소들에 검사를 받으려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백 명이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긴 노동시간 등으로 평소 검사조차 받기 어려웠다는 것을 드러냈다.

미등록자 무조건 합법화하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미등록 이주민 문제다.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약 4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을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도 코로나 진단검사에 응하는 미등록 이주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야만적

인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온 탓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8월부터 배달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미등록자 1294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이후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단속된 미등록 이주민

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곳)도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는 구금된 이주민의 석방을 거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항공편이 막히면서 새로 입국해 미등록자가 되는 경우는 줄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출국하지 못해 미등록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몇 차례 출국 기한을 유예하면서도 그 기간에 취업은 금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니 이주노동자들은 생계 걱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2월 출국 기한이 유예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장 13개월 동안 농어업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농어업의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용자들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이주민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주노동력이 부족해져 정부는 체류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이것은 ‘단기 순환’ 기초의 기존 이주 노동력 정책에서 얻는 이득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일시적 이주 근로자 수입 제도는 자본가에게 ‘저렴하고’ 단결력이 없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2000년)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이주민 통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며 미등록자도 혹독하게 대한다. 그것이 코로나 방역에 해롭더라도 말이다. 국경 통제를 일부 완화할 때조차 그 대가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한다.

요컨대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유지돼 온 이주민 차별과 국경 통제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방역에도 해로운 효과를 내고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미등록 이주민을 조건 없이 합법화하고,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또 이주민에게도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주민 차별과 인종차별에 모두 함께 맞서야 한다.